

지식인의 자기 해방과 민중

김동춘

민중과 지식인의 관계 혹은 민중 의식이라는 해묵은 주제가 요즘 『당대비평』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즉 민중이 단순히 역사의 희생자가 아니라 파시즘 혹은 권위주의 정권을 지탱시킨 하나의 기둥이라는 주장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다. 민중들이 한편으로는 역사의 희생자이기도 하나, 다른 편으로 지배 권력의 헤게모니에 포섭되어 파시즘 권력에 대한 복종 의식을 내면화한 다음, 가시적인 폭압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수구 세력의 등장을 묵인·방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풍미했던 과도한 민중 메시아주의가 민중을 혁명의 주체로 미화하였다가 운동의 퇴조 분위기 속에서 성급하게 민중 환멸론으로 돌아섰던 일들을 되돌아켜 보면, 오늘의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니다. 정치적 민주화 국면에서도 그에 부응하는 사회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거나, 사회적 습관의 비민주성이 정치적 민주화 자체의 발목을 잡은 일들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지적에 공감할 수 있다. 더구나 문화 혹은 습관에 대한 강조는 주로 운동의 퇴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오늘날 사회과학과 역사학에서 문화, 혹은 부르디외가 말하는 아비투스(habitus)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세계사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과연 중요한 것은 문화요 의식이요, 그 아래에 깔려 있는 무의식이요 습관 이요 망탈리테(mentalite)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저 습관의 단단한 껍질을 부수지 않고서는 역사가 진전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좌파 혁명가나 운동가들은 이 점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혁명의 대의가 민중의 습속과 관행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권력 물신주의, 권위주의, 기회주의, 부르주아적 사고의 잔재에 의해 참담하게 무너지는 일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당 독재론이 최고 권력자 1인의 독재로 퇴화되어 버리고, 계급 투쟁의 담론이 사적인 보복으로 현상화된 것도, 바로 이러한 낡은 습관의 잔재를 버리지 못한 민중들이 갑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나타난 불행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민중의 이러한 퇴영적인 모습은 중국의 '문화 혁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상주의적인 청년 지식인들의 과격한 투쟁 노선을 정당화해 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에게 큰 상처와 환멸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민중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저 구시대의 잔재들, 권력에 대한 굴종 의식과 권력 물신주의(power fetishism), 단세포적인 이기주의 등을 현상 그 자체로만 강조하면 진실의 오직 한 측면만을 본 것이다 우리는 민중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연유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태도나 의식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피상적으로만 정리되기 쉽다 민중들이 비민주적이고 노예적인 품성을 획득하게 된 일상의 체험을 단지 외부에서 혹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밖에서만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가 강조한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 방식이고 습관인데, 억압과 독재하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러한 습관을 획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식과 태도를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현상학적으로 직시해야 사실의 총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면, 과거 1980년대의 대학생 혹은 청년들이 그러했듯

이 민중들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다른 편으로 도구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한 청년들은 결국 자신의 변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중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민중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의 의식이 문제다”,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각성해야 하며 정치 의식을 획득해야 한다”라는 비판 혹은 지적은 누구나 아주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로는 아무런 실천적인 대안도 꼬집어 낼 수 없다 사실상 그것은 이평수의 민족 개조론만큼이나 무의미한 말이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 서도 민중들이 상황 돌파의 독립 변수인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지적들은 그들이 조직되어 있을 경우의 예상 가능한 행동과 민중 일반의 개인적인 행동을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과 의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습관을 형성한 역사적 상황을 먼저 문제삼지 않을 경우, 그러한 진단은 반드시 허무주의에 도달하게 된다

필자는 대학 초년 시절이던 1970년대 후반 어느 여름, 의식화의 길을 겪은 후 처음으로 지식인의 입장에서 서서 민중의 처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 그것은 학교 당국과 경찰들의 감시를 피해서 갔던 농활의 현장에서였다 우리가 찾아갔던 농촌 마을에는 선배 학생들이 비판하던 ‘관변’ 측 부녀회장이 있었다 선배들은 이 이주머니는 거의 구제 불능의 반농민적·반민주적 인사라고 후배인 우리들에게 강조하였다 심지어는 농민들을 잘못 인도하는 ‘독소’와 같은 존재라는 인상도 심어 주었다. 선배 학생들이 설정했던 민중의 상은 박정희의 반민중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투쟁가로서의 농민이었다.

우선 우리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비판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에 당황했다 그래도 하루의 작업을 마친 후의 저녁의 분반 활동 시간 혹은 작업 시간 중 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틈만 나면 박정희의 농민 말살 정책, 저곡가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려 애썼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그 문제의 이주머니는 사사건건 우리의 주장에 따지를 걸거나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서 우리를 실망·분노케 하였다 그 분위기에 서 그 이주머니는 우리들의 ‘적’이었다. 부녀회장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등 각

중 관변 단체에 들락거리면서 상당한 이권을 챙기는 존재로 의심되기도 했다. 모든 학생들은 그녀를 기피하였고 그녀를 증오했다

그런데 우리가 농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정선선 기차간에서 나는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정선 5일장 관광 코스로 개발되어 서울 사람들이 많이 그 기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때는 장터에 니물이나 발작물 등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내다 팔려는 무지랭이 촌사람들만이 타던 오지 열차였기 때문에 열차간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우연하게 그녀와 마주 앉게 되었는데, 그녀는 내게 팡주리에 강냉인지 무엇인지를 담아서 시장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내 눈을 의심하였다 며칠 전 동네에서 내가 보았던 그녀는 관청의 꼬니풀이었으며, 그러한 지위를 누리는 기득권층이었는데, 정선선 기차 안의 그녀는 서울로 가는 우리 대학생들, 특히 몇 명의 여학생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적인, 삶에 찌든 촌 아주머니였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촌스러움, 화장기 없는 거친 얼굴, 거친 손바닥이 유난히 강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권력자, 기득권층이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이 시골구석에서 험한 발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농민의 아내로서 부각되었다 정선을 떠나는 우리 대학생들과 시골 동네 부녀회장 그녀의 처지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우리 농활의 방해꾼, 관청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챙기려는 반농민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온 나 자신을 크게 되돌이켜 보게 되었다.

나는 당시 정선선 열차 안에서 내가 가졌던 순간적인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어느 역에선가 그녀는 내렸고, 우리는 다음 역에서 서울로 가는 태백선 열차를 갈아탔다 그녀는 이제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10일 동안의 농활 기간 동안 농민들을 의식화시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던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서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 후에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관심 갖는 이도 기억하는 이도 없었다

이것은 나의 작은 경험이지만, 내가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의식화된 이후

민중과 지식인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 최초의 의미 있는 기억이다. 이후부터 나는 민중 혹은 대중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전업 사회학자가 된 이후 '계급'이라는 말도 나에게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나는 민중을 위해 헌신하지도 못했으며,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사람들과도 정신적 거리를 두었다. 지식인의 담론과 그들의 삶이 큰 거리가 있다는 사실만 안타깝게 확인하였으며, '부채 의식'을 가진 채 그들에게 언어와 담론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만을 유지했다.

이 후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 노동 운동가 들을 만났으며, 최근에는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에 나서면서 피해자 유족인 농민들을 비교적 많이 만났다. 작년 어느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어떤 발표자가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가방끈 끈' 참가자들과 '가방 끈 짧은' 노동자 민중 출신 참가자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어떠한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다. 내가 이미 발표한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분단과 한국사회』, 『전쟁과 사회』에 한국의 민중들에 대한 내 생각의 일단은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론의 깊이가 없어서 한국 민중사, 한국의 민중 의식에 대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동료 연구자나 독자 들은 나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면서, "민중을 너무 수동적으로 그린 것은 아닌가?" 라고 비판한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전쟁과 사회』를 읽고 나서 일부 서평자들은 민중의 변혁적 측면과 역동성을 간과하고, 너무 수동적이고 예측적인 존재로만 묘사했으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이러한 비판을 듣고서 나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민중들에게 어떠한 독자적 사고와 행동의 입지를 박탈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다. 그렇다면 지난 1970, 1980년대는 과연 전쟁 상황과 얼마나 달랐던가? 내가 기억하기에도 노동 문제에 눈을 뜬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노동 현장은 전쟁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들이

끓어 죽을 각오하고 자기보다 몇십, 몇백 배 힘이 강한 사용자나 경찰에게 대
 든 경우는 많지 않았다. 상황 그 자체로 보면 그들의 모습은 대단히 굴종적이
 었지만, 나는 먹고살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납작 엎드려 살아온 민중들
 이 파시즘 권력의 조력자라는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생각은 민중
 이 지배층, 지식인과 같은 정도의 선택의 기회와 사고의 자유를 가졌다는 전
 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간층 혹은 부르주아적 출신 배경을 갖는
 지식인이 자신의 처지에서만 민중을 보는 태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왜 여전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 사람들의 문제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1979년의 부마항쟁의 정신이 60억 들인 부산의 민주공원으
 로 왜소화되어 버리고 오늘의 부산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 그리고 대기업 노동조합이 평소에는 그렇게 투쟁의 언사를 남발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내 밥그릇 문제에 치중하는가, 왜 전쟁 전후 피학살
 자 유족들이 자신의 고통과 한(恨)을 전국적인 이슈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
 기 지역만의 특수한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는가 하는 유사한 문제들을 마음 속
 에 담아 두고 있다. 바로 이 문제의 근원에는 민중의 고통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압 구조와 허용된 바 문제 해결 구조가 버티고 있다.
 작은 보상으로 그들을 회유하면서 큰 문제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구
 조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들의 근원에는 한국 민중들이 살아온, 달리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낱알의 축적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남겨 두지 않았던 권력과 돈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
 다. 바깥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다. 배가
 고파 군에 입대했다가 동족을 살해하는 일에 가담한 군인이나, 서울 와서 공
 장에 들어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구사대원이 된 노동자의 일
 그러진 모습들은 분명 개인의 도덕성 탓만은 아니다. 그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조건들의 맥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

지난 호의 『당대비평』에서 문부식 주간이 강조한 것처럼 왜 광주 사태의 피해자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가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왜 꼭 국가 유공자가 되려 하는가?”라고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적절한 비판이기는 하나, 비판 이전에 한번 더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다 즉 그들이 정말 대접받는 국민으로 살아왔다면 그러한 보상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농민과 노동자들은 한 번도 국민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다. 일제 시대 아래 관청은 그들을 돌보는 기관이 아니라 뺨을 때리고 고혈을 짜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에게 공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은 기대할 수 없었다 우리는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한 한국 민중들의 피해 의식이 어떻게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보상 심리’는 당연한 인간 혹은 인격체로서의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자신의 것을 최대한 챙기려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헤겔이 말한 불행한 의식 상태다.

기업이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거덜나는데도 기업 차원에서 더욱 완전한 복지와 높은 임금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노동자의 근시안적 모습들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아 내려 하는가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 그 부정적 행동의 근원을 알 수 있게 된다. 영동 노근리의 미군 학살의 피해 주민, 거창 신원면 지역의 피해자 유족들이 자신들만이 정말로 억울한 순수 ‘양민’이므로 우리 문제만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기피하는 행동도 모두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무서운 이기주의다 그러한 동료의 이기주의에 직면한 민중들 자신이 서로를 불신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기주의에 지친 지식인 운동가들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들의 곁을 떠났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 상황 맥락, 그들의 가용한 선택지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한다. 그들의 경험과 시야 속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달리 행동할 길을 알지 못하며, 달리 행동해서 성공한 예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의 이러한 점

에 대한 성찰은 곧 지식인 자신에 대한 성찰 작업이 될 것이다 병들어 있는 것은 민중이 아니라 사실은 지식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중들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민중들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식인과 민중이 함께 변화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가진 사람’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매일 겪고 있는 민중들이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불평과 욕이다. 부르크네르는 불평은 “반항의 타락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부, 완전한 자기 개화, 축복)을 암시하면서 우리가 처한 상태에 결코 만족하지 말도록 부추기는 민주적인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불평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이자, 체념의 표현이고 “사소한 불운에 대한 야합”이므로 사실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결국 불평만으로 그치는 민중들은 분명히 이 불합리한 질서의 유지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불평을 ‘삶의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은 바로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다. 불평이 민중의 삶의 방식인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길, 즉 직접 저항하는 길을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쉽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 불평을 하기는 하지만 드러내 놓고 저항하지는 못하는 민중들의 일상을 염두에 두고 보면, 한편에서는 민중들이 그러한 불평을 저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편으로는 평생을 불평 속에서 살면서 결과적으로 부정의한 세상 일이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지배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거나, 때로는 자그마한 권력과 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들은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 아래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또 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바로 자유인 혹은 근대적 공민으로 훈련되지 못했다. 파시즘, 군사 독재, 권위

주의 체제하의 민중들은 모두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실상의 군사 파시즘 체제였던 일제 말의 체험, 그리고 분단 50년의 체험은 근대적 공민(citizen) 대신에 모든 것을 위쪽에 맡겨서 선택의 방향을 오로지 권위 있는 자의 결단에 기대하는 충실하지만 비열한 '신민'을 계속 만들어 냈다.

결국 우리는 민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을 통한 학습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민중들에게 학습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보다는 일터의 생활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교사는 없으므로 학교 교육이나 매스컴은 이들의 체험을 통한 학습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갖지 못한다. 물론 원론적으로 보더라도 노동 계급의 형성은 주체와 구조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다 영국의 노동사학자 톰슨(E P Thompson)은 이 점을 강조하였다

노예적인 정서와 문화를 갖는 민중들은 고통이 인내의 한계를 넘을 때, 분노가 극에 달할 때, 강한 저항 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의 저항 행동 중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사회의 진보와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모습을 지닌 경우도 있다. 아니 민중들의 최초의 저항은 모두가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의 양상을 지닌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설령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의 양상을 지닐지언정 그들이 개인적으로 불평만 하다가 이제 저항 행동을 감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앵겔스가 강조하였듯이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노동자의 '인간 선언'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행동이 미치는 결과, 그러한 행동에 대한 탄압들, 행동 과정에서 보여준 동료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저항이 단순한 이기주의의 표현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저항 그 자체가 민중들이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교육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이다. 교육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고, 자신의 행동을 전체적 맥락에서 고찰하도록 해 준다. 교육의 정신으로 인도되지 않는 행동, 집단적 의사 소통과 반성의 공간이 없는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피해자 의식과 집단 이기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기도 한다. 즉 저항은 자유 정

신, 주체화로의 학습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일부 지식인들은 민중들의 저항 일반을 계급 투쟁이라고 찬양하고, 저항을 하지 못하면 계급 의식이 없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저항 속에 숨어 있는 왜곡된 모습을 보지 못하며, 저항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상태에서 잠재되어 있는 힘을 파악하지 못하는 셈이다. 여기서 민중의 저항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이 문제가 된다.

지식인들이 민중을 저항으로 유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식인들은 저항한 이후 감옥에 갔다와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 있지만, 민중들은 그렇지 않다. 1970년대에 어떤 노동자가 쓴 「순이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수필을 보면 “목사나 신부나 기독교 기관 사람들은 탄압을 받아 운동을 못하게 되면 갈 곳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우리 노동자는 해고되면 그날로 집안 식구가 살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처지에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동료에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사태의 진면목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쉽게 저항하지 않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셈이다. 민중들이 간직하는 내재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지식인이 자신이 설정한 합리성과 당위성을 강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저항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민중들에게 더욱 심각한 고통을 가져왔을 경우, 지식인들은 그것을 함께 해석하고 다음의 행동을 준비할 수 있는 행동 지침과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지식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빠진다면, 민중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불평의 퇴적층에 새로운 층 하나를 더 쌓아올리고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진리로 굳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민 운동과 노동 운동의 거리감을 설명하는 데도 무슨 입장과 노선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시민 운동가와 노동 운동가의 상호 이해 불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 시민 운동기들에게는 노동자들이 이기적인 집단으

로만 나타나고, 노동 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 운동가는 민중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고통을 도외시하는 체제 영합적인 운동가로 비쳐진다.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확실히 공민 의식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이기적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현행 기업별 노조 체제하에서 노동자들이 바람에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 살리기 운동에 나서는 것 외에 이들이 어떤 대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고 체험한 지식인 출신 노동 운동가들은 수 차례의 고민 끝에 결국 노동 운동을 떠나 자신의 길을 나선 바 있다. 지식인들이 떠나간 뒤에 노동자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조합 조직 작업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불행히도 그 조직의 성격상 사용자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반쪽만의 노조, 즉 기업별 노조였다.

공익성은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민중들이 공익성 혹은 공공적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단기적 이해 관심을 접고 자신의 입장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들은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익의 침해 가능성 혹은 그것이 갖는 사회 역사적 의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익이 결정적으로 침해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극히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공익성이란 단어는 차라리 사치에 속한다. 지식인이란 존재는 자신의 입장을 객관화시켜 낼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하나, 그들 역시 자신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민중들이 겪은 것과 같은 곤란함과 장벽에 부딪혔을 때도 그러한 객관화 능력을 견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이 점에서 지식인이 반드시 객관적 존재라는 가설은 의문시된다. 어떤 때는 지식인들이 민중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한다. 삶에 부대끼는 일은 지식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편에서 진리와 맞닿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이 구조 조정의 위기 앞에서 회사를 살리자고 부르짖는 노동자들에게 “당신 회사는 문제투성이므로 퇴출되어야 한다”, “그 회사의 퇴출을 막

는 것은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회사의 운영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고, 회사가 그 모양이 될 때까지 그 회사의 경영 상황을 알고 있거나 회사의 잘못된 경영 상황을 알고도 침묵했던 정부의 해당 부처 고위 관료, 언론인, 회계사, 감사, 변호사 등의 책임을 먼저 추궁해야 한다

백성은 ‘이식위천’(以食爲天), 즉 “백성들은 먹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긴다”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은 백성은 먹는 일에만 신경 쓰는 존재라고 비하하여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먹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일의 근본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모든 주이나 주장은 바로 먹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진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민중들로 하여금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자기 실현과 해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논란거리가 된다 그 점에서 지식인들이 사회 운동이나 비전의 설정에 개입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나는 우리 민중들의 비뚤어진 모습을 보고 크게 한탄하고 좌절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번 한국 방문시 흥세화가 강조한 것처럼, 잘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먹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자기 실현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지식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 그들은 이들 민중들과 함께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식인들이 민중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당파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사고, 경제적 이기주의적인 측면을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의 해방은 먼저 지식인의 해방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식인의 자기 해방, 그것은 지식인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일이 과연 진리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재를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검토와 비판, 비교와 종합을 거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그러한 지식에 충

실해지는 것이다. 지식 노동은 생산자의 노동과는 분명히 성질을 달리한다. 하나의 측면에만 시야를 고정시키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지식인은 사실 노동자들보다 더 경직된 존재이다. 지식인의 자기 해방은 노동자의 해방과 함께 가야 한다 □

김동훈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분단과 한국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근대의 그늘』, 『전쟁과 사회』 등의 저서가 있다 E-mail dckim@mail.skhu.ac.kr